

※연결번호

시 험 과 목 명

응시번호

성 명(한글)

검
인

곽희준

감독관
확인

제 2 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답안지

감독관
확인

※연결번호

시 험 과 목 명

점 수

채점위원인

집계자확인

형 법

※

※

※

문 1 - 1

1. ~~결론~~ 결론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근거

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127조)

②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하고 객체가 되는 공무상의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익으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비밀이 누설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어야 한다.

누설이란 공무상의 비밀을 공개 관공인 또는 제3자가 지득할 수 있게 유출하는 것이라서 추상적 위험행위로서 누설하는 행위로 공무상의 공익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한다.

③ 판례는 선문의 경우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닌 "국가적 기밀"을 그 보호의 대상이라든 하면서 비록 개개의 수위위험에 아무런 기재가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양면시험용지 1부 및 등기신청서양식 1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면시험용지 및 등기신청서 위쪽의 각 해당란에 모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는 페이지 순서대로 기재하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등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지에 인쇄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가 기재한 답안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답안지에 인쇄된 시험과목을 기준으로 채점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용 법전을 가져가거나 훼손(낚서 등 포함)하여서는 안되고,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시간 종료된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답은 수정이나 하더라도 ~~그~~ 그러한 구속영장의
반부죄라도 ~~안~~ ~~있~~고 ~~그~~ ~~지~~ ~~의~~ ~~내~~ ~~용~~ ~~이~~ ~~구~~ ~~속~~ ~~이~~ ~~야~~ ~~기~~ ~~가~~
답을 수정 안해도 ~~그~~ ~~지~~ ~~의~~ ~~내~~ ~~용~~ ~~이~~ ~~구~~ ~~속~~ ~~이~~ ~~야~~ ~~기~~ ~~가~~
비밀 누설의 해당한 ~~것~~ ~~이~~ ~~아~~ ~~니~~ ~~다~~.

④ 따라서 제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문 1-2

I. 결론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II. 근거

① 타인은 교부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127조)

교부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이 교부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피의자
공범과 대항범이 해당한다.

피의자 공범이란 범의가 성립되기 위하여
~~반~~ 반대의 2인 이상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전제되는 범의유형을 만하여
그 중 대항범이란 상호 대항하는 2인
 이상이 반대의 필연한 범의를 만든다.

③ 대항행위 경우 형법은 각칙의 형식에 대한 형사처벌이후 알 그 형에 대하여 직접 형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항행위의 내무장가자 사치는 형법 ~~총칙~~ 총칙상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형법 제122의 무인을 보면 공무원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의 형사처벌만 규정 하였을뿐 그 내무장가자인 대항하는 자의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그 정황이 없다.

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무인에게 그의 형식에 대한 형법 제131조의 파장은 성립될 수 없다.

문제 2

I. 결론

형벌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II. 근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형법 제352 제1항)가 성립한다

② 횡령죄는 자기재산, 타인소유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사신, 법률상의 위탁, 신탁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만하고 부동산의 경우

기재된 내용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권등이 있을 것을 안고 한다.
행위는 위헌판정결과에 반해 불법행위자를 실현
하는 단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헌법으로 행형
행위를 하는 동안 처분권 하로 기수가 되어
● 헌신성 손해를 결과 발생을 회피 않는다.
피해자의 손익권을 그 보호행위이다.

~~②~~ ~~위헌판정 결과에 반해 불법행위자를 실현~~

③ 판례는 처분권등이 아직 처분권등이 권한을
거차지 능력이 양도인은 여전히 처분자의
자위에 있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처분권
추진하여 들은 가라고 알다하여 양수인에게 대한
판례이며 위헌 판례에 기하여 공판
보관하는 자에 있어 양도처분
판례에 관한 사후처리를 위임받아 처리
하는 것이 해당행위 불능 판례므로
양도인을 양수인에게 대한 판례이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 있어 양도처분 하였다.

~~④~~ ~~선문당 측은 자신이 양도한 양대하 보증금 반환~~

④ 선문당 측은 자신이 양도한 양대하 보증금 반환
처분을 아직 처분권등이 능력이 기차로
추진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그 과정
판례이며 그 헌법 ~~위헌판정 결과에 반해~~ 보관하고
할 수 없는 양도 행위회 회당하여
아니었다는 것이 판례에 의한 결론이다.
행위지 성립하지 않는다.